



세종연구소

경제와 정책

1 북한의 2006년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성임

5 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및 한국의 대응

송대성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상현

13 일본의 유엔 안보리 재도전

이면우

16 중·일 관계: 중국의 시각

김향해

19 현재의 중·일 갈등 에 대한 일본의 인식

진창수

북한의 2006년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성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sungijung@hanmail.net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1월 10~18일) 보도는 궁금중을 불러 일으켰다. 정상회담과 중남부 지역 시찰 등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가 6자회담의 재개와 개혁·개방의 속도 및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한 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월 1일 북한은 “원대와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신년공동사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2006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지난 해를 ‘성공적’이라 자평한 후 올해 목표 및 전투구호를 제시하고, 이어서 ① 대내 부문별 과업 및 당사업 방식 ② 통일

문제 등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06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를 전투구호로 제시하고 있다. ‘대담하고 전면적인 공격전’이라는 표현과 달리 그 내용은 기존정책의 지속 등 체제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체제결속 및 미국의 대북압박 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06년 신년공동사설은 ‘선군정치’와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체제결속 및 미국의 대북압박 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주공전선’으로 농업을 설정한 점, ‘3대 애국운동’의 제시 등 대남관계에 적극적인 점, 대미 비난은 원론에 그치고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이 특징적이다.

첫째, 올해 북한의 ‘주공전선(主攻戰線)’은 작년에 이어 농업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북한은 토지정리사업, 백마-철산 물길공사, 양강도 대흥단군 및 삼지연군에 감자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식량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작황은 1990년대 이래 최고치인 480만톤(작년대비 5% 증가)에

달하는 등 다소 좋아졌다.

이와 관련,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마지막 시찰지가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연구소는 보리, 콩, 벼, 감자 등 식량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4월 방중 시에도 박봉주 내각총리를 한춘허(韓村河) 시범농촌단지에 보낸 적이 있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향후 관련 조치 등이 주목된다.

둘째, '3대 애국운동'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제시 등 대남관계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다. 구체적으로 '자주통일' 부문에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전통화하고, '반전평화' 부문에서 '거룩적인 미군철수투쟁'을 벌이며, '민족대단합' 부문에서 '반보수 대연합'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남관계의 적극화는 대미관계의 불명확성과 6자회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돌파구인 동시에 경제부문에서 대남 교류를 강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대미 비난은 원론에 그치고 '핵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미국을 통일의 기본 장애물로 표현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한다든지 핵 참화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미국의 대북위협 주장은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폐문제, 인권 등으로 불리한 국제여론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 이행을 직접 거론할 경우 북한책임론이 등장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정책 전망

올해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선군정치' 하에 군사적 위력 강화, 경제난 해소, 민족공조 강화, 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등 체제유지

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김정일(65회) 및 김일성(95회) 생일행사를 위해 우상화 강화 및 주민동원에 나설 것이다. 부문별 주요 정책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상분야에서는 '선군정치' 하에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당 및 경제기구에서 혁명 3세대들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내외적 '성공'의 동력을 '선군령도'와 '선군정치'로 제시한 연장선에서 올해도 '선군정치'는 지속될 것이며, 7.1 조치 이후 주민들의 사상 이완과 미국 등의 인권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될 것이다.

'선군정치' 하에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될 것이다. 올해는 'ㄷ·ㄷ' 결성 80주년과 청년동맹 창립 60주년으로 주민동원 및 사상교양사업에서 청년들의 활용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혁명 3세대들의 내각 및 지방당 간부로의 진입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ㄷ·ㄷ(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80주년(10.17)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창립 60주년(1.17)이다. 두 행사의 공통점은 청년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ㄷ·ㄷ'는 1926년 김일성이 만주에서 일제타도 및 사회주의 건설에 동조하는 청년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이며, 청년동맹은 14~30세의 비당원 청년들로 구성된 근로단체이다. 따라서 주민동원 및 사상교양사업에서 청년들의 활용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한편 당 및 경제기관에서 혁명 3세대들의 간부등용이 증가할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에는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혁명의 3세, 4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 일심단결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김정일 이후, 즉 후계자와 연관되어 있다. 후계자의 권력기반은 혁명 3, 4세대가 될 것이며 이들의 지배엘리트로의 진입은 그 포석의 일환이 될 것이다.

혁명 3세대이란 30~40대로 항일빨치산의 손자나 전·현직 정치국원의 자녀들이며 '고난의 행군기'에 부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당내 경제담당자, 내각 경제관료,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 등의 세대교체에 따라 이미 혁명 3세대들의 진입은 시작되었다. 올해 혁명 3세대들의 내각 및 지방당 간부로의 진입은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들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각책임제 하에 실리주의적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올해는 '기간공업 및 농업 3년 연속계획'의 첫 해로 10여년 만에 3년 중기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경제전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은 경제계획의 실질적 책임자로 '통일적 지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내각책임제 하에 실리주의적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기간공업 및 농업 3년 연속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목표미달을 공식 인정하고 3년간(1994~1996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를 설정한 후 중기계획이 나온 적이 없다. 10여년 만에 3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경제전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 과정에서 내각은 경제계획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내각의 '통일적 지휘' 역할을 제시하는 등 지난해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 보다 한층 강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내각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책임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1월 중국방문이 개혁·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4개 경제특구(신의주,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 중 개성을 제외하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번 방문지 중 광

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은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학습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개성(남측 자본)-신의주(중국측 자본)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남 및 통일분야에서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증대되고 6.15행사의 정례화 등 회담 및 행사 또한 적극화되는 등 정치·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는 경제부문,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 해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의 원자재와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투자 보장 등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정례화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전반기에는 남북 공동행사 및 분야별 회담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동시에 남한 내 반보수와 보수 등을 구분하고 5월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성과를 거두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경제부문,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 해 남북농업협력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정례화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넷째, 대외분야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협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미관계 및 6자회담에서 소극적 태도에 머물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교류 및 6자회담에서 자국의 입장강화를 위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중국의 대북 투자증대나 경협 확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도 예

너지부문 등에서 소규모 경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 접안시설, 화학정제 공장 등을 갖춘 나진·선봉지역은 러시아극동지역 민간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특구이다. 그리고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과의 관계증진에 꾸준히 나서는 한편, 동남아국가들과의 교류협력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험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미관계 및 6자 회담에서 소극적 태도에 머물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전략 방향

‘북한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우리 사회는 상반된 입장으로 갈리곤 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및 6자 회담 전략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북한 또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더욱이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이 올해 ‘우리 민족끼리’를 보다 강조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긍정적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않는 이상, 북한의 개혁·개방은 진전이 없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선부터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지만을 공고히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가 물러나 있거나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여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최고 지도자간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자의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주변국가들과 남북한간에 특구를 활용하는 3자 경협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3자 경협은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에도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제1권 1호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미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國益의 관점에서 양운철

북핵문제와 일본의 안보정책: 북일관계와 6자회담의 전개
김성철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이대우

정치경제 발전모델 비교연구: 세계화, 탈산업화 시대의 생산
산레짐 강명세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East Asia:
North Korea, China and Korean Security 이상현

Cooperative Security Regimes :
A Comparison of OSCE and ARF 정은숙

6·15 남북공동선언 전후 북한의 민족공조전략 실상:
내용, 전망, 대응 김해중

세종정책연구 제1권 2호

논문
-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한구

특집 : 한미안보포럼 발표논문

SESSION 1: R.O.K.-U.S. RELATIONS

- Michael McDevitt / Joon-Hyung Kim

Doug Bandow / Sang-Hyun Lee

SESSION 2: NORTH KOREAN NUCLEAR ISSUE

- Larry A. Niksch / Geun Lee

Selig S. Harrison / Haksoon Paik

SESSION 3: INTER-KOREAN RELATIONS

- L. Gordon Flake / Yu-hwan Koh

David C. Kang / Taehyun Kim

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및 한국의 대응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nkang@sejong.org

작년 12월 16일 미 국무성은 북한의 위조화폐 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1) 1989년부터 제조해 온 연도별 100달러짜리 정밀 위조지폐(일명 '수퍼노트'라고 칭함), (2) 북한 외교관이 제3국의 은행에 위조지폐를 입금하는 사진, (3)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가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 북한 대사관과 주고받은 팩스와 도청 자료, (4) 북한이 미국 조폐국에서 쓰는 스위스제 '인테리오 칼러'라는 기계를 국제테러단체나 러시아 마피아 조직 등을 통해 구입한 점 등의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및 EU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취하는 수순들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은 비단 금번의 위폐발행이 처음이 아니며 마약 밀매 및 불법 유통,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 외국인들 강제납치 및 비송환 등 그 불법의 범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은 불법 활동의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불법 활동의 의미, 불법 활동과 관련 향후 예측, 그리고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국제무대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저질러 온 그리고 근래에 발각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 북한 스스로 불량국가(Rogue State)/ 범죄국가(Criminal State)임을 자인: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분류되어있다. 불량국가란 '어떤 국가의 통치행위들이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기준들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나라(a state that abides neither by international law nor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per governance and behavior)'라고 정의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은 북한 스스로 불량국가(Rogue State)/범죄국가(Criminal State)임을 자인하는 셈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강제적 조치를 자초하는 셈이다.

그 동안 북한은 불량국가 군(群)으로부터 해제하여 달라는 많은 항변들을 하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항변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행위, 지난 수년간 북핵문제를 두고 김정일 정권의 막가파식의 각종 대응행태, 강제 납북한 외국인들에 대한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협상태도 등으로 인해 무위가 되었으며, 북한의 각종 불법 행태들은 불량국가로부터 해제는커녕 오히려 확실한 불량국가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단순히 불량국가로서 확인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질서파괴 및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국가(Criminal State)'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 북한 스스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임을 자인: 개인이 그 인생 삶을 범죄행위에 기반하여 꾸려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다. 어떤 국가가 건전한 국가경영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획책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기반으로 국가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실천한다면 그 국가는 범죄국가요 철저히 실패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에서 국가가 주동이 되어 남의 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역사적 사례는 히틀러시대 독일 이후 북한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위는 북한 스스로 실패한 국가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범법행위는 단순히 북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남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논문조작 사건과 더불어 “저 민족은 사기의 명수들이구나!”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강제적 제재’ 방안을 북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들이 그 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였고 아직까지 그 노력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그 동안 보여주었던 각종 불량국가적인 행태들에 대하여 참가국들은 내심 상당한 실망과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속출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강제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의 도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 한국정부의 ‘민족공조’ 의미 격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소위 ‘민족공조’ 혹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대북 정책 관련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민족공조 차원의 노력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의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선(善)한 일이나 선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악

(惡)한 일이나 악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서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혹은 질적으로 불량한 사람 이미지가 짙어진다.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당당하지 못한 활동들을 지지하고 끼고 돌면 그 끼고도는 사람 자체가 법적 도덕적 위배자로 평가 받는다. 부모형제간에도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함부로 끼고 돌면 ‘불법 활동 공모자’ 혹은 ‘범인 은닉자’로 취급받는다. 한국정부의 북한과 공조의 의미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질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북한 민족공조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의 민족공조 차원의 노력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의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선(善)한 일이나 선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악(惡)한 일이나 악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서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혹은 질적으로 불량한 사람 이미지가 짙어진다.

북한의 불법 활동관련 향후 예측

북한이 그 동안 국제무대에서 저질러온 불법 활동들과 관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다.

▲ 미국-북한 관계 악화: 북한의 불법 활동관련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대단히 공세적이고 강력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위폐제작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2005.12.9 로버트 조지프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북한의 달러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2005.12.22 라파엘 펠 미의회조사국 위폐연구원), “북한은 범죄국가”(2005.12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으로부터 각종 강력한 제재관련 내용들이 표명되고 있다. 미국은 단순한 의사 표명뿐만이 아니고 작년 6월에는 3개의 북한기업,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8개의 북한기업들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WMD)확산과 연계되어 있는 중

거들을 갖고 자산동결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작년 12월 미국은 마카오 은행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 미국 내 금융기관들과 마카오 은행의 거래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강경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에 대해 북한은 사실 무근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국대사의 '북한은 범죄국가'라는 발언에 대해 "미 대사들 중 제일 악질"이라고 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 향후 미국-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불법 활동 관련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대단히 공세적이고 강력하다. 북한의 달러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북한의 불법 활동 강력제재'로 선회: 미국은 북한 보유 핵무기 포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위하여 1994년 이후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고 그 합의들의 실천을 통해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고,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의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더욱 복잡하여져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북한의 불법 활동이라는 새로운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실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조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미국의 국익보호차원에서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이라는 불법행위, 미국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북한의 마약밀매 행위,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되어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들은 북핵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보다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북한의 대남 '민족공조' 요구 강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구라파 제국들의 북한 불법 활동에 대한 공조된 제재조치는 북한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가하여질수록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요청은 말 할 것도 없고 남한 내 존속하고 있는 소위 '만경대정신 숭모세력'(친북세력+반미세력+좌경세력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민족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에 항거하는 각종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고 남한정부가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과감히 물리치지 않는 한 남한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범법 활동들에 대한 강력제재조치들이 옥죄어올수록 북한의 장기인 사술행위들을 점증시킬 것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사술행위들은 개혁개방의지 대외과시, 한반도에서 평화추구 이미지 과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제스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 강력제재 조치들에 대한 회피방안으로 북한의 각종 사술 구사 점증: 북한은 그들의 범법 활동들에 대한 강력제재조치들이 옥죄어올수록 북한의 장기인 사술행위들을 점증시킬 것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사술행위들은 개혁개방의지 대외 과시, 한반도에서 평화추구 이미지 과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제스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중국방문도 ‘북한은 이와 같이 개혁개방 노력을 하고 있는 범죄국가 아니다’라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하면서, 중국에게는 “형님 이렇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라는 강한 사술적인 측면의 목적이 있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 오면 올수록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축 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평화추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미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풀자고 다시 사술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대응원칙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첫째,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맹목적인 민족공조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공조할 분야가 있고 절대적으로 공조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 동포애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에 질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혹은 참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일들을 놓고는 공조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을 두고 그 불법 활동을 비호한다든가 국제적인 제재조치들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공조는 해서는 안 될 공조다.

한국정부는 이미 상당한 실수들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과 관련 북한을 비호하였던 각종 주장들(‘북한의 달러위조를 보도한 LA Times 기사가 잘못된 것,’ ‘미국의 수사발표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범죄국가 발언은 유감,’ ‘북한을 범죄 국가로 이야기한 미국대사의 소환결의를 검토하겠다.’)은 한국정부 및 한국인들의 비합리성을 스스로 드러낸 실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 한국은 세계이성(world reason)에 입각한 철저한 국제공조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이성에 입각한 철저한 국제적인 공조는 우선 국제적으로 한국정부의 합

리성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북한에게는 한국을 함부로 앞잡아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이성을 저버리고 북한의 범법 활동을 무조건 감싸고돌면 한국정부 자체가 북한에게 무게 없이 인식됨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우스운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건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 한국정부는 맹목적인 민족공조 지양, 세계이성에 입각한 철저한 국제공조, 진정한 동족애를 갖고 북한의 불법 활동 교정 노력,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불법 활동 연계 금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하여는 진정한 동족애를 갖고 교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만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진정으로 그 개인을 사랑한다면 개인이 범하고 있는 범법 행위의 교정을 위하여 지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 개인에 대한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동족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위한다면 동족애의 표현을 북한의 범법활동 완전 교정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눈치만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충고 없이 북한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그저 북한의 주장만을 비호하고 공조하는 북한지원은 북한에 대한 참된 지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범죄 활동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들에 대해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경우 절대 북한과 공조하여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범법활동 제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한미공조든, 국제공조든, 민족공조든 세계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범법활동들을 다루어야 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hlee@sejong.org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첫 번째 ‘동맹파트너십을 위한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회의를 가졌다. 양국간 전략대화는 작년 11월 APEC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경주 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된 고위급 전략대화이다. 경주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역동적·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 발전 시키기로 합의하고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 및 인권의 공동 가치 증진에 유용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정상은 동맹 및 전략 문제를 다룰 양국 외교장관 사이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운영기로 했다. 한·미 간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양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고위전략대화는 없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전략대화를 이미 운영 중이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경주선언의 합의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의 중요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최근 양국관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에 도달한 점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등의 분쟁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

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틀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6자회담과 관련한 향후 논의는 북한이 안전보장 등을 받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자회담의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달려와 위조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폐문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측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대화의 중요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에 도달한 점이다. 둘째,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틀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셋째, 양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양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각국이 안보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설적

으로 역내 안보불안과 갈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안보딜레마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 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가 갈등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양자관계 중심의 안보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의미

이번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점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파견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에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반테러·반확산을 전략 기조로 채택하고, 그에 따라 미군의 태세를 불박이형 군대에서 신속기동대응군 형태로 바꾸는 군 변환(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의 변환전략은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군사태세의 변환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태세의 변환이다. 미국의 군사력 변환은 동맹 네트워크, 군사역량, 그리고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GPR로도 알려진 글로벌 방위태세 재편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에 요새화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적을 억지하고 동맹국 방어의 의지를 과시하며 적대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군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군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전개가 가능해야 하고 숫자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은 해외의 대규모 영구기지에 덜 의존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을 순환하는 배치방식을 택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테러 전쟁과 미

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군사차원의 변환과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최근 조지타운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지향할 21세기 외교로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강조하였다. 변환외교란 외교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미 국무부가 추진해온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더욱 확대·발전된 개념이다. 라이스 장관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국가들 내부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즉, 정권 자체의 근본 성격이 국제관계에서 힘의 분배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타국의 안보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과 타국의 이익을 포괄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변환전략은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군사태세의 변환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태세의 변환이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반테러·반확산 중점이 2기에 들어 여기에 민주주의·인권 확산이 추가되면서, 이를 군사변환과 변환외교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의 큰 구상인 것이다.

변환외교의 목표는 될 수록 많은 국가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장을 도모하는 그물망 지식외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 분야에서도 군 변환에 필적하는 외교태세의 변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외교 인력을 21세기적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구 8,000만 명의 독일과 10억 명이 넘는 인도에 같은 수의 외교관이 배치돼 있는 유럽 우선주의를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동시에 외교관들을 각국의 수도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여러 국가를 동시에 관장하는 지역 공공외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군사

와 외교의 협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도움을 얻어 외교관 일인 포스트와 가상 포스트(Virtual Presence Post)를 많이 만들어 세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국식 자유를 전파하기 위한 현장의 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부시 1기 행정부의 반테러·반확산 중점이 2기에 들어 여기에 민주주의·인권 확산이 추가되면서, 이를 군 변환과 변환외교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의 큰 구상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변환전략에 따른 핵심적 요구사항이다. 그것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양국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여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로 초래될지도 모를 주변국들과의 긴장관계와 안보 공백 문제이다. 특히 미국의 안보전략이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인식해온 중국의 반응이 우려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북아의 분쟁 확대 가능성 때문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간 분쟁에 투입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합의한 것은 동맹 재조정 논의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해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위협 때문에 동맹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할 이유는 크지 않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루의 위험은 동맹관계의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동맹의 이익이 있으면 대가도 따르는 법이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분명히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맹 완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략적 유연성을 주한미군의 유입(flow-in)은 되지만 유출(flow-out)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만 바라본 결과이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분명히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맹 완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동맹은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는 의지적 결정의 산물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협상의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 쟁취할 것은 쟁취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글로벌 방위태세에서 핵심적 사안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동맹의 의사소통 구조가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동맹의 건전성과 신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관계에서 실무 차원의 조율과 조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만이 한

미동맹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실상 실무차원의 조정은 동맹의 우호 정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실무적 조율이 잘 되었다고 해서 동맹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한·미 양국이 동맹의 목표와 역할, 근본적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할 때 동맹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글로벌 방위태세에서 핵심적 사안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주한미군을 어떤 상황과 기준, 판단에 따라 동원할 것인지 수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전략대화의 후속조치로 금년 4월에는 서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 모임에서 양국의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금년 하반기에 2차 장관급 전략대화를 열 계획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안보 공백과 국민 불안 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종연구소 간행도서 목록

세종정책총서

-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정치·사회』, 박기덕(편)
-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 정성장(편)
-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협력』, 김성철(편)
-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안보협력』, 이태환(편)
-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외교·안보』, 이상현(편)
-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 연구』, 양운철(지음)
-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저)
- 『러시아 국가와 사회: 새질서의 모색』, 정한구(저)
-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저)
- 『한국의 국가전략: 전략환경과 선택』, 백종천(편)
-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 이상현(편)
-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 정은숙(저)
-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정성장·백학순(공저)
- 『한·미동맹 50년: 분석과 정책』, 백종천(편)
-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편)
- 『경제위기와 복지의 정치』, 이숙중(편)
-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김성철(편)
-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홍현익, 송대성, 이상현(공저)
-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면우(편)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를 중심으로』, 이태환(편)
-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진창수(편)
- 『APEC과 ASEM의 비교 연구: 경제적 이해와 전략적 경쟁』, 김기수(편)
- 『전환기 한·일관계』, 이숙중(편)
- 『동북아 환경협력』, 이태환(편)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홍현익·이대우(공편)
-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종석·백학순·진창수·홍현익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진창수(편)
- 『미일동맹외교』, 김성철(편)
-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통화권력과 경제적 이해』, 김기수·왕윤중(공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재도전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wlee@sejong.org

지난 1월 5일 일본정부가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결의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했던 독일, 인도, 브라질 3개국은 일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제출했던 결의안을 그대로 유엔사무국에 재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말하는 'G4'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안보리의 개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일본의 새 결의안

일본이 새롭게 제시한 결의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엔안보리의 이사국 수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에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이 있는데 이에 6개국을 더해서 총 21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증가될 6개국 중 어디가 상임이사국이 되고 비상임이사국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유엔가맹국에 의한 선거를 통해 3분의 2, 즉 128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은 국가들만을 상임이사국으로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선거의 회수를 제한하여 상임이사국의 증가폭이 최대증가폭인 6개국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의 이러한 새로운 결의안은 지난해의 결의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를 표명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지난 해 일본이 독일,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제출한 'G4'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안보리의 구성국을 현행의 15개국에서 25

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 중에서 상임이사국에 6개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에 4개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선거의 회수를 제한하지 않고, 새롭게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6개국이 정해질 때까지 선거를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는 신임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관련된 것이다. 즉, 신임상임이사국은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만, 신임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확대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리뷰에 대한 규정으로, 헌정개정이 발효된 지 15년 후에 이번의 헌정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새롭게 제시한 결의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엔안보리의 이사국 수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이 있는데 이에 6개국을 더해서 총 21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유엔가맹국에 의한 선거를 통해 3분의 2, 즉 128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은 국가들만을 상임이사국으로 한다는 제안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의 'G4'안은 상임이사국의 수를 대폭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임이사국이 크게 비대해지는 것은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명확한 반대의를 표명했고, 결국 'G4'안은 유엔총회의 표결까지도 가지 못한 채 폐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사국의 수를 대폭 조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결의안은 미국의 입장을 십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본 안보리 진출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러나 일본의 숙원이었던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가 새로운 결의안의 제시로서 달성될 수 있을지 혹은 가능성을 얼마나 높였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형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입장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실버버그 미 국무차관보는 지난 해 12월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입장을 다시금 표명하면서, 확대안과 관련하여 상임이사국을 2개국 정도,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을 3개국 정도로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어느 국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확대안의 추진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간표는 없다... 폭넓게 합의를 얻어서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숙원이었던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가 새로운 결의안의 제시로서 달성될 수 있을지 혹은 가능성을 얼마나 높였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형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입장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볼튼 미 유엔대사에 의해서도 피력됐다. 지난 해 말에 진행된 마이니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안보리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일본은 상임이사국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한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일본을 비롯한 ‘G4’ 국가들이 제시한 결의안은 이미 지난 것으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 확대는 19개국이나 20개국이 상한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상임이사국을 2개국 정도,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을 2-3개국 정도로 확대

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틀 내에서 일본과 복수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임도 밝혔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결의안은 미국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한 것이어서 청신호를 나타내지만, 문제는 미국이 안보리 확대 및 그 방안보다는 사무국의 개혁이나 인권이사회 창설 등의 다른 쟁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현재 유엔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분쟁후의 부흥지원 등에 대해서 권고하는 평화구축위원회의 창설, 직원의 교육을 추구하는 윤리실의 설치, 5년 이상 경과된 업무를 재편 및 개편하는 사무국의 개혁, 그리고 인권이사회 창설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과제를 보면 새로운 과제에의 대응이라는 측면과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의 두 가지가 주요 축임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과제의 추구하고 함께 좀더 활용하기 수월한 유엔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거꾸로 말하면 유엔이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인권위원회의 멤버에서 탈락한 2001년의 경험이라고 하겠다. 인권위는 이제까지 각 지역별 그룹에서 제시된 후보국들로 구성되는데, 2001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측의 후보국가들이 많아서 투표한 결과 미국이 탈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인권위에 수단이나 리비아, 그리고 쿠바와 같은 국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를 저지하는데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상임이사국은 모든 주요 유엔기관에의 참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볼튼 미 유엔대사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 유엔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잘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혹자는 인권이사회 창설을 ‘유엔재생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현재로서 미국은 인권이사회 창설을 비롯한 유엔의 개혁이 제대로 진

행되지 않으면 6월에 있을 후반기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비추어볼 때 미국에 있어서 안보리의 확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안이고, 일본처럼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결코 서둘러서도 안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미국에 있어서 안보리의 확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안이고, 일본처럼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결코 서둘러서도 안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잃은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G4'의 분열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분열이라고 하지만 일본만이 혼자 떨어져 나온 양상인데, 일본으로서는 지난해의 결의안을 재제출하고자 하는 3개국을 설득하여 지지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의도는 상임이사국을 6개국 더 늘린다는 지난해의 결의안을 사수하고, 그러한 모습을 어필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난 해 별도로 아프리카연합(AU)안을 제시했던 나이지리아 등의 4개국이 그대로 재제출한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향후 전망

과연 그러한 방법이 제대로 통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의 공동보조, 그것도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축으로 다시금 새로운 안을 준비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21세기의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하겠는데, 일본의 진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해서 일본 혹은 기타 3개국 중 어느 한쪽의 진입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 아니라 분열 자체가 가져오는 응집력의 결핍이다. 즉, 다른 이슈에 밀려, 그리고 문제의 지난함 때문에 안보리의 확대라는 이슈가

적어도 당분간은 사장될 가능성이 좀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새로운 안에 대해서 여러 대안이 모색 중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동조국가들이 형성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대공작을 진행한 중국의 의향을 고려한 '준상임이사국'의 방안이나 미국과의 향후 협의를 위해 증가될 6개국을 상임이사국, 준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등으로 나누는 추가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 'G4'의 분열을 가져와 일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됐고,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힘든 과제가 됐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안에 대해서 여러 대안이 모색 중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동조국가들이 형성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 'G4'의 분열을 가져와 일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됐고,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힘든 과제가 됐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현재의 새로운 결의안을 3월중에는 확정하여 공동제안국을 모색하고 9월에 폐막되는 제60차 유엔 총회 중에는 결착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이웃한 한국으로서도 지난 역사와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익과 대의를 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다시금 안겨진 것이라 하겠는데, 그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 · 일 관계: 중국의 시각

김향해 (중국 연변대 교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imhh21@hotmail.com

2005년 중 · 일은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을 방문한 일본 민주당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 · 일 관계를 진단한 말이다. 중 · 일은 역사인식문제, 대만문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에너지자원 분쟁 등 쟁점을 둘러싸고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여 왔다. 중 · 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양국이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역질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며, 역사인식문제와 대만 문제가 핵심 갈등 사안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 · 일 갈등의 구조와 원인을 분석해보고 중 · 일 관계의 발전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전략적 경쟁구도

21세기 들어 중 · 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중국 국력의 급부상과 일본 국력의 상대적 약화에 따른 역내 역학구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여년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일본과의 국력격차를 크게 줄여왔다. 반면에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중국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래 처음으로 강대한 중국과 맞서게 되었으며,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고이즈미 정부의 정치성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2월 신방위계획대강과 2005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중국을 처음으로 위협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아소

외상은 지난 12월 22일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일본 현직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중일 갈등의 심층에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변화하는 양국의 역학구도가 있다. 일본국민들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우려가 고이즈미 정부의 정치성향과 상승하여 중국 견제라는 대중국정책의 기본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해외파견, 미 · 일 동맹 강화 및 군사대국화 등 동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의 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증대해 나가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강화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시 미 행정부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파 세력 및 군사대국화를 조장함으로써 일본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동아시아 공동체 참가국 문제를 놓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내심으로 반기지 않고 있다.

9 · 11 총선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총리는 중대된 구심력을 이용하여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신보수주의적 외교노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 2006년에도 미 · 일 동맹의 세계화, 일본의 방위능력 향상 및 헌법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를 이끌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도 기

본적으로 기존의 대중 강경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 역시 일본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전략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중국 강경노선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향후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중일 관계의 기본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대만문제가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중·일은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중·일 수교 공동성명〉, 〈중·일평화우호조약〉 및 〈중·일 공동선언〉을 차례로 발표하여, 상기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것이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정치토대가 되어 왔다. 중국은 이 두 이슈 영역은 일본이 침해해서는 안될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부단히 도전하여 왔다. 2001년 취임한 이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이미 5차례나 참배하여 두 나라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에 중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등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등 강력한 외교 수단으로 대항하여 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으므로 2005년 12월 동아시아 3국 정상회담 취소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역사문제와 대만문제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결립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기에 예상되는 중국과의 파워게임을 승리로 이끌려는 정치 전략적 의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또한 종교적 성향이 짙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겐(建前)으로 전쟁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본심(本

音)으로는 신(神)의 국가의 정체성 되찾기, 즉 천황이 발동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맹주였다는 과거의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고취시켜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도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도 신사참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3상(총리, 관방장관, 외무장관) 동시 신사참배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일 관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외교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미·일은 2005년 2월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간 2+2 안보협의회에서 대만해협 사태를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는 바,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 행위이다.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 입장을 보일 경우 대일 강경태도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중일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냉경열’에서 ‘정냉경냉’으로

그러나 중·일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긴밀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양국 모두 경제실리는 놓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경제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에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일본 기업의 대중진출은 대형,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되지만 대중 ODA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내의 반일정서와 악화된 정부 관계는 일본기업의 대중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사업 대상으로 일본 신칸센(新幹線) 기술과 독일의 기술을

동시에 채용키로 협의한 것이 그 예이다.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일은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안보적 대결 구도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중·일 관계는 정냉 경열(政冷經熱)로부터 '정냉경냉(政冷經冷)'의 관계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정치 안보적 대결구도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중일관계는 '정냉경열'로부터 '정냉경냉'의 관계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문제

이외에 조어도 영유권 문제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잠재적인 분쟁 사안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양국은 2005년 9월 군함과 전투기까지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키는 긴박한 상황까지 갔었다. 중국이 이미 제2위의 원유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2020년에는 원유 소비량의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잠재적인 분쟁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총체적으로 외교 담판을 통한 해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

그러나 중·일 관계의 가장 악재로 되는 것은 국민감정의 악화이다. 2005년 4월 왜곡된 우익 교과서의 검증통과를 도화선으로 중국 내에서 과격한 반일시위가 진행되고 일본에서도 중국 관련 시설에 대한 위협이 가해진 바 있다. 이러한 국민레벨에서의 갈등양상은 정부간 관계를 날카롭게 대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일본에 외교압력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일본 자민당이 9·11 총선에서 압승하였는데, 이는 일본 국민들의 '혐중'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중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일

본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만약 일본의 비이성적인 내셔널리즘이 우익세력의 부채질에 의해 고조될 경우 중·일 관계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중국 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양국간 민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중일 관계의 가장 악재로 되는 것은 두 나라 국민감정의 악화이다. 이를 감안하여 양국간 민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6년 중·일 관계가 냉각국면에서 계속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나, 파국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다. 중·일 간의 경쟁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므로 향후 10~15년 동안의 마찰과 조율기간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에 대한 전략 입지를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러시아 국가와 사회

정한구 저

이 책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체제 변화를 다루고 있다. 지난 스무 해에 걸쳐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 질서를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새 질서 세우기는 제정(帝政) 러시아 시대의 서유럽 따라잡기,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과 같이 또 하나의 "위로부터의 혁명"이며, 이의 추진자인 국가와 이와 대면한 사회관계를 살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쓴 글을 모은 것으로서 크게 러시아 정치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경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리고 연보(年報, "러시아 국내 동향, 1994-2004")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중·일 갈등에 대한 일본의 인식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전통적으로 중·일관계는 ‘정랭경열(政冷經熱, 정치적으로는 차갑고 경제적으로는 뜨겁다)’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그러나 현재 중·일관계는 경제교류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자칫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의 발목까지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었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반일시위가 일어났으며 중국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전통적으로 중·일관계는 ‘정랭경열(政冷經熱, 정치적으로는 차갑고 경제적으로는 뜨겁다)’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그러나 현재 중·일관계는 경제교류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자칫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의 발목까지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양국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일관계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이며, 이후 중·일간 정상들은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중·일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현재의 중·일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주로 일본 정부관계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중·일 갈등의 구조적인 요인

중·일 양국은 한국보다 20년이 앞선 1972년 9월 29일 국교를 맺어 2005년 이미 1,600억 달러의 교역규모로 발전해 왔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일본은 유럽연합(1,772.9억 달러), 미국(1,696.3억 달러)에 이은 중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자 한 해 20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올리게 해 주는 소중한 파트너이다. 거대시장 중국 공략을 위해 일본은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개발원조(ODA)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중국시장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개혁개방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뛰어들어 온 국가로서 현재 920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본기업에 취직해 있으며 2005년 일본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의 총액이 49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일본기업의 투자는 중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경제협력관계 속에서 중·일관계는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2002년 중·일국교 수립 30주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우호적으로 유지해 왔다.

최근 중·일관계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중·일관계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이다. 여기서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입장을 일본은 존중할 것과 중국정부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 등을 합의 하였다.

하지만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위한' 중·일공동성명은 상당히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당시 중소대립과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냉전 상황 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던 두 나라가 상호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 외교적 타협을 한 것이었다.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중·일간 관계도 1972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고, 1972년의 이상적인 합의가 점차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1972년 공동성명 발표 직후부터 양국간 갈등의 불씨는 내재해 있었다. 더욱이 1972년 공동성명이 중·일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론적인 헌법이라면 이후 각론 성격의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 갔어야 했는데 양국은 관습적인 룰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것이 현재의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중국은 관습적인 룰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공동성명이 중·일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론적인 헌법이라면 이후 각론 성격의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 갔어야 했는데 양국은 관습적인 룰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것이 현재의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쟁점에 대한 일본의 인식

중·일 양국간 갈등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다. 일본의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이 참배하면 중국 측은 외교적인 문제로 삼는다는 것이 중·일 간에는 일반적인 관습으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일반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관습과 룰은 양국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는 그저 경험을 통해 확립된 애매한 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룰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본이 이러한 룰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은 중국정부가 일본도 이러한 룰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지난 30여 년간 비교적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사건건 자신들의 기준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 측을 비판하고 때로는 실행행사까지도 해 왔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볼 때는 중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 군사비 확충 등과 관련된 일본 내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로 삼지 않으려는 일본의 노력을 오히려 중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일본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이즈미 총리의 소신과 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일본 국민들은 최근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강행을 중·일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면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일본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이즈미 총리의 소신과 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 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도 중국 측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는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세계 2위의 경

제대국이면서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한다. 이점에서 중·일 양국은 에너지 확보와 관련해서 러시아 송유관 유치 경쟁 및 중앙아시아, 동중국해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처럼 일본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 양국 간은 치열하게 시베리아 송유관 유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송유관이 건설될 경우 중국은 2005년부터 50만 배럴, 일본은 2009년부터 10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중동에서 56%, 일본은 8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그만큼 석유 수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해야 하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공교롭게도 러시아 송유관 확보 문제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이 먼저 뛰어 들고 나서 일본이 나중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 중국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사사건건 중국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문제는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같이 선점하여 자신만 이익을 보려는 태도보다는 공생 공영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반성’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중국)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사죄’는 피해자(중국)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일본)는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표현이나 행동 또한 금전적 등의 배상이 따른다고 본다.

셋째, UN 상임이사국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다. 일본은 전후 UN 운영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해 왔으며, 전후 60년 동안 일본은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평화 애호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도 이전과 같이 일본이 침략국으로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유엔 상

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일본의 노력을 무시한 억지 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 측이 생각하는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반성과 사죄는 엄연히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성’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중국)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사죄’는 피해자(중국)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일본)는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표현이나 행동 또한 금전적 등의 배상이 따른다고 본다. 중·일공동성명에는 분명히 ‘반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중국은 ‘사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일본은 1972년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던 양국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이 마음대로 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센카쿠 열도는 1885년 이후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해 3번의 현지조사를 거쳐 단순히 이곳이 무인도라는 사실 뿐 아니라 청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래서 1895년 1월 14일 각의 결정에 따라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이후 일본이 영토로 삼은 南西諸島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1895년 5월 발효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의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 및 澎湖諸島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도 센카쿠 열도는 동 조약 2조의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포함되지 않고 제3조의 南西諸島の 일부로서 미군정하에 놓여 1971년 6월 17일 서명된 오키나와 열도 및 大東諸島에 관한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오키나와반환협정)에 의해 일본에 반환되었던 지역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일본 영토로서 센카쿠 열도의 지위를 무엇보다도 명료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대만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의 미군정하에 놓였던 지역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고 일본은 인식한다. 중국정부와 대만도 1970년 후반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개발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문제 삼기에 이르렀다. 또한 종래 중국정부 및 대만이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아닌 지질적 근거를 들어 센카쿠열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논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중·일관계의 향후 전망

향후 중·일관계에 대해 일본에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낙관주의자들은 양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972년에 우호를 위한 공동성명을 맺은 경험을 양국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양국간의 관계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는 일본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원하는 중국은 서로가 필요한 국가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비관주의자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들이 중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비관주의자들은 양국간에는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일본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물밑으로는 실무진 사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반감과 최고 리더십들의 양보가 한치도 없다는 것

이다. 게다가 최고 리더십들도 자국내 여론에 편승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비관주의자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들이 중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양국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얻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 지

한반도 평화확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여부를 결정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요소다.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에는 화해에 의한 방안, 안보역량에 의한 방안,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에 의한 방안, 북한정권 제거에 의한 방안 등 4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각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들을 갖고 있다. 참된 한반도평화확보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적용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전쟁방지 효율성 여부, 국민들 지지여부, 동맹국 미국의 지지여부, 경제성 여부, 실천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다. 본 서에서 필자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지혜로운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의 선택을 위하여 위에 언급한 5가지 기준과 그 동안 남북한 및 중동국가들이 겪었던 경험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참고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다. 한반도 평화확보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정책결정자들, 학자들, 학생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할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적 지혜를 압축하여 놓은 단행본.

「정세와 정책」 최근 출판목록

2006년 1월호(통권 115호)

- 이상현, “2006년 국제정세 전망”
정성장, “2006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이대우, “2006년 미국 정세”
이태환, “2006년 중국 정세”
진창수, “2006년 일본 정세”
정은숙, “2006년 러시아 정세”

2005년 12월호(통권 114호)

- 이재승, “APEC 정상회담의 성과와 평가”
조성렬, “제5차 1단계 6자회담 평가”
송화섭, “주일 미군 재배치 분석”
차창훈, “미·중 군사교류 재개의 의미와 전망”
은재호,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2005년 11월호(통권 113호)

- 김기수, “APEC 정상회의의 의의”
이남주,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의에 대한 분석”
양문수, “남북교류협력의 관점에서 본 대북관광사업”
강명세, “독일 총선 분석”

2005년 10월호(통권 112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6자회담 타결〉 특집을 마련하면서”
홍현익, “제4차 6자회담: 평가와 대책”
서보혁, “베이징 공동성명과 대북 안전보장 문제”
전성훈, “북핵 폐기와 검증”
양운철, “6자회담의 타결과 향후 대북지원 방향”
송대성,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
이상현,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면우, “2005년도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와 전망”
김열수, “한국의 위기관리체제: 평가와 대책”

2005년 9월호(통권 111호)

- 정성장, “8·15민족대축전과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과제”
이태환, “미중 고위급 회담과 후진타오 방미의 의의”
정은숙,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합의와 전망”
박종평, “현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2005년 8월호(통권 110호)

- 송대성, “한국군 문화와 국방안보역량 강화방안”
이호철, “중·러 정상회담과 군사협력 강화의 의미”
이상현, “미·인도 핵협력의 전략적 의미”
하중문,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 움직임과 한일관계”
정상률, “이란 대선 이후의 중동 정세 변화 전망”

2005년 7월호(통권 109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6·15 공동선언 5주년: 성과와 과제〉 특집을 마련하면서”
정성장,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대화의 성과와 과제”
남성욱,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전망”

- 김성한,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과제”
이면우, “‘서틀’ 외교의 의의: 2005년 제1차 한일정상회담 재고”
강명세, “기로에 선 유럽연합: 어디로 갈 것인가?”

2005년 6월호(통권 108호)

- 백승주, “남북차관급 회담 평가와 후속과제”
한석희, “렌잔 방문과 양안관계”
남수중,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가능성과 영향 분석”
김기석, “일본 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

2005년 5월호(통권 107호)

- 진창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국의 대응”
정은숙,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일관계”
이면우, “일중 갈등의 조형도”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전략’”

2005년 4월호(통권 106호)

- 양운철, “6자회담과 남북경협”
전봉근, “통일외교국방 업무혁신: 성과관리제 도입 배경과 방법론”
이상현, “미 민주주의증진법의 내용과 의의”
김홍규, “중국 제10기 전인대 3차회의: 내용과 의의”
최봉태, “일제 강제동원피해 특별법”

2005년 특집호(통권 105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북한 핵 보유 선언: 대책과 전망” 특집호를 마련하면서”
정성장, “2·10 북한 외무성 성명의 배경과 의의”
이대우, “미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진창수, “일본의 반응과 정책전망”
이태환, “중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정은숙, “러시아의 반응과 정책전망”
이상현, “한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2005년 3월호(통권 104호)

- 이대우,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이영길, “미·중 군사대화의 배경과 함의”
정은숙, “미·러 정상회담”
오승구, “35차 다보스 포럼의 의의와 한국에 대한 함의”
최봉태, “일제 강제동원피해 특별법”

2005년 2월호(통권 103호)

- 정성임, “북한의 2005년 신년사와 대내외정책 방향”
이면우,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 신방위대강을 중심으로”
하도형, “중국 2004 국방백서 분석”
전홍찬, “우크라이나 대선의 국제정치적 함의”
유현석, “아시아 지진해일과 국제협력: 한국의 역할 모색”

※ <http://www.sejong.org>에서 출력 가능함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11권 4호 | 2005년 겨울

- 목 차 -

논문	9·11 테러, 이라크 전쟁과 정보실패	전 우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동기와 딜레마	마 상 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경제 정책의 딜레마	김 기 석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정책결정 요인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 유 신
	『조선중앙년감(1989-2004)』에서 서술하는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독일통일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분석	김 석 향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 기 정
서평	북지국가의 정치와 사회협약	강 명 세
	신간 안내	이 면 우
부록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가역)	일본방위청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회원권리】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3-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 세종연구소 교육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1 / Fax. 031-723-8800
 e-mail: public@sejong.org

정세와 정책 | 2006년 2월 1일

발행인 | 백종천 편집인 | 이상현 편집기획위원 | 백학순, 이태환, 정은숙, 진창수
 편집간사 | 정성일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463-600)
 전화 | (031)750-7611 팩스 | (031)723-88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블러틴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